

금남로에서

신향락



경영 컨설턴트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서 ‘개혁을 위해서 저지세력 감소에 3분의 2 정도의 힘을 사용하고, 3분의 1의 힘을 추진세력 증대에 사용하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는 이와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성공한 개혁’ 보다는 ‘좌초한 개혁’이 훨씬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원칙과 소통이 전제가 돼야 한다. 원칙을 무시한 개혁은 혼란을 부추기고, 저지세력의 반발을 불러와 실패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소통 역시 저지세력의 입을 봉하고, 추진세력에 귀를 열어 놓으면 독재로 흐르기 마련이다.

도전에 직면한 광주교육

코비 박사의 이러한 리더십은 개혁 패달을 밟고 있는 광주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광주교육은 인위적인 변화의 기류 속에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실력광주’의 위상 추락 우려와 고교 배정방식의 졸속 시행, 사학(私學)과의 갈등, 교원특혜 파문 등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다.

고교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 저하는 전교조 출신 장휘국 교육감의 취임 일성에서 예고되긴 했지만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점에서 파장은 만만치 않다. 당시 장 교육감은 “학교·학생간 경쟁 지양과 차별을 심화하는 특권교육에 반대하고 주입식 교육보다 창의적인 전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그들만의 교육개혁이라면...

강조했다. 진보교육 철학을 지역교육에 접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그는 이를 위해 각 고교에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 후 학습 및 야간 자율학습 시간 준수, 0교시 수업 금지, 방학 중 보충수업 시간 단축 등을 통보했다. 위반 정도가 큰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지도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덧붙였다.

보수 성향의 교육계 인사들은 이를 두고 “급진적인 정책 시도로 지역교육의 안정과 지속성을 해칠 수 있고, 교육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치우칠 경우 학교와 학생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결과는 기우가 아니었다. 시 교육청이 현재 3학년이 2학년 때인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3월 등 3차례 치른 전국학력평가 1등급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ऐसा 몹시 않다. 언어와 수리, 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1등급을 맞은 학생 수는 지난해 3611명, 3568명에서 올해는 3099명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비율도 7.8%, 7.7%에서 7.2%로 톱 떨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2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타지역에선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 심화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도 ‘우리만의 개혁’에 몰두하고 있으니 학교와 학부모들

의 심사가 불편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시 교육청과 사학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교 배정방식을 놓고 대립하는가 하면 일부 사립학교의 일탈행정에 대한 제재과정에서 소송까지 가는 극단적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공명화된 사립학교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상식에 벗어난 학사행정을 했던 건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도 길을 이기식 감정 대응은 학생들에게 피해만 안길 뿐이다. 그 칼날이 학급수 감축과 재정지원 중단일진 데, 달리 도리가 없지 않는가.

고교 배정방식 문제 역시 흑을 때려다

흑을 붙인 ‘곰수’에서 비롯됐다. 지난 3월 공고를 통해 진학생들이 선지원 2곳을 하되, 후지원은 못하도록 강제해 놓고도 3개월이 안 돼 백지화시켰다. 사립학교를 선지원했다가 탈락한 우수학생들을 의외로 공립학교에 배정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한 배정방식 변경이 예고된 부작용을 빚자 원위치시킨 것이다.

무원칙·소통 부재가 요인

사립학교의 반발을 자초하고, 원치 않은 학교에 강제 배정될 학생수가 무려 3000명에 달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데도 밀어붙인 시 교육청의 어쭙잖은 ‘졸속행정’이 우를 범한 셈이다. 공·사립간 실력차가 압연한 현실에 인위적으로 줄여보겠다는 게 가당한 일인가.

개혁은 기본을 바로 세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원칙이 없고, 소통이 일방이라면 반발과 혼란을 부르는 개혁(改惡)일 뿐이다. 저지세력에 ‘뺨살’을 하고 추진세력에 ‘뺨살’을 하는 내 편, 네 편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실패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 1년8개월 동안 지역 공교육에 대한 지역민의 평가는 ‘별로’다. 아니 불편한 심기가 보다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당부 하건대, 개혁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섰부른 건 아닌지, 그들만의 교육개혁이 아닌 지 스스로 자문해볼 일이다. 내일의 광주교육을 위해서 말이다.

(이사·논설주간) hlshin@kwangju.co.kr



박홍근

3년 전(2009년 7월29일자) 본 칼럼에서 ‘빌바오 효과’에 대한 글을 썼다. 철강산업의 붕괴로 쇠락의 도시가 된 스페인 북부 도시 빌바오, 인구 35만의 작은 항구도시를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 시킨 구겐하임 미술관에 대한 글이었다. 1997년 개관 이래 지난 10년간 매년 1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했다는 내용과 세계적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독특한 디자인,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최고 브랜드, 대표적인 현대미술 작가들의 설치미술 등, 문화 콘텐츠

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례를 일컬어 ‘빌바오 효과’라 부른다는 내용이였다.

필자는 지난 2월에 2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 여러 도시를 여행했다. 나에게 있어서 스페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우디’라는 천재 건축사와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다. 이미 책과 영상물을 통해 많이 접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컸다.

일행이 구겐하임 미술관에 도착한 날은 금요일 오후였다. 그런데 미술관 내외부가 너무나 썰렁했다. 관광객들이 우리 여행팀 외는 없어 보였다. 일부 개인 관광객들은 있었지만, 가이드에 물어보니 요즘엔 관광객들이 적다고 했다.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많은 생각을 했다. 왜 이러 썰렁할까? 하루 평균 3000여 명이 다녀갔을 미술관이... 많은 생각들이 스쳐지나 갔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나는 다음

‘빌바오 효과’의 한계와 교훈

과 같은 생각을 했다. 첫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 후 발생한 유럽재정위기가 관광객을 급감시켰다는 생각. 둘째, 이미 특이한 건축물을 볼 사람들은 다 보았고, 또 올만한 지속성 있는 문화적 감동과 매력적인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 셋째, 소규모 도시라는 것과 타 도시로부터 접근성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등이다.

좋은 조건과 유명세가 있었던 도시들도 극복해야할 과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여려는 광주의 현주소를 생각해 본다.

첫째, 문화전당이 세계적 주목을 받을 만

은펜칼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한 건축이고, 세계적 건축사의 작품인가?

둘째, 예산은 풍부한가? 7년 동안 지어진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애초 예산의 14배에 달하는 건축비용이 들었는다는 문화전당은 애초 예산이라도 확보가 될 조는는가?

셋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문화적 감동이 있는 매력적인 보고, 즐기고, 쉴 곳은 있는가?

넷째, 문화전당과 연계된 주변 도심재생 사업은 잘 진행되는가?

다섯째, 도시규모와 경제력의 한계, 타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극복할 방안은 있는가?

그 좋은 건축과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는 빌바오, 하물며 모든 면에서 불리한 ‘광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간단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시경쟁력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건축사·전남대 겸임교수)

기고



노두근

전남 서남권의 산업동맥 역할을 해 온 목포~광주간 국도1호선(광목간 국도) 주변 지역의 일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광목간 국도의 교통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사람 통행이 뜸해지자 주유소나 휴게소, 음식점 등이 문을 닫고 있고, 지역경기의 침체 영향으로 농공단지나 개별 입지 중소기업들이 힘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광목간 국도, 대략 70여km 되는 도로변

을 식품공장, 창업보육센터, 연구소 등 중소기업체 등으로 연결할 수는 없을까? 마산·창원간 산업도로 주변에 덕덕덕덕 붙어 있는 공장과 창고,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산업단지처럼 말이다.

요새 장맛비가 기승을 부린다. 습기가 많지만 비건 후 햇살을 받으며 가끔 나타나는 쌍무지개처럼 필자는 희망의 중소기업 천국을 꿈꾸어보고자 한다.

첫째, 목포에서 광주(남평)까지 국도1호선(영산강)을 따라서 ‘중소기업 벨트’를 만들자. 현재 목포 삼향면에서 무안 청계농공단지를 거쳐 무안을까지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 그런데로 기업들이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안을 경계에서 함평 전 구간(약 8km)은 학교 농공단지 외에는 거의 기업체가 없고 국도 양변이 대부분 전답이

여서 지역 생산성이 광목구간 중에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주문평(다시)에 이어 금천~산포~남평 구간을 보면 문평지방산단과 금천 등 도로변의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변이 전답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광목 전구간을 대략 3~4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성화된 중소기업 삼각벨트(영산강 연계)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목포~무안간 1권역은 생활자기공장지대, 함평구간 2권역은 축산 등 식품가공기업, 나주구간 제 3권역은 배, 복숭아 등 농수산물 가공공장 및 물류기업 유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유치 및 기반조성을 지자체에서 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남도가 주도하고 목포·무안·함평·나주·

이용해 불합리한 대출 수수료라는걸 떼가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대출업자들은 어떻게 내 휴대폰 번호를 알고 이런 메시지를 마구 보내는지 신기하고 놀랍다. 내 개인정보가 어디서 이런 업자들에게 새나가는지 기막힌 것이다.

요즘은 휴대폰 기능도 발달해서 1577, 070, 저축은행, 대출 등 이런 식의 발신자 표시는 아예 스펀카단을 해 두기 때문에 이런 전화는 안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 하지만 ‘똥’은 놔 위에 나는 놔야 있다’는 식으로 업자들도 요즘은 머리를 써서 이런 전화를 쓰지 않고 031, 055, 042 등 일반 지역 국번을 활용해서 전화를 걸기 때문에 속아서 받기 일쑤다.

정말 갈수록 심해지는 대출사기 전화 막을 방법이 없을까?

▲권혁조·광주시 동구 내남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아직도 여전한 학교폭력 이대론 안 된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경찰과 교육청, 학교의 강력한 척결 의지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폭력의 그들이 모욕과 따돌림 등으로 지능화되면서 더 짙어져 가는 양상이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5일간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광주 1441건, 전남 131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광주 58건, 전남 53건에 이르는 등 신고 및 상담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 전체 신고전화 가운데 약 36% 수준인 520건이 학교폭력 관련이었다. 유형별로는 폭행·협박 202건, 모욕·따돌림 71건, 공갈·갈취 38건, 기타 158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도 신고전화 중 36.5%인 481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했으며, 폭행·협박 117건, 모욕·따돌림 93건, 공갈·갈취 7건, 기타

208건 등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폭행·협박 및 갈취 등 직접적인 가해가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 서 지도와 단속이 강화되자 ‘간접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 학생 대부분이 부모나 교사, 친구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고민 끝에 117 센터에 전화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 폭력이 피해 학생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와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변에 알리지 않고, 학교 측이 모르는 상황에서 지도·단속 하기가 사실상 역부족이다.

따라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와 학부모들도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단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해파리 피해 확산 근본대책 서둘러야

전남 연안에 수은 상승으로 해파리가 극성을 부리면서 그물이 찢기고 어획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해파리 주의보·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은 피해와 어종 품질 저하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에 서 제외되고 해파리 제거사업비도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해파리가 대거 출몰했던 지난 2006~2008년 전국에서 연평균 760억~229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해파리 출몰 기간 어로활동을 못한 손해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피해는 더 크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해파리는 품질 저하에 따른 가격 하락, 어구 파손, 어획활동 중단 등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인명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해파리에 쏘여 8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문제는 해파리 피해에 대한 대책과

보상이 극히 미미하다는 데 있다. 해파리가 출몰하면 수산과학원이 주의보·경보 등 조치를 내리게 되고, 해당 지자체가 해파리 제거작업에 나서게 된다.

피해 보상은 2010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포함돼 같이 열렸으나 눈에 보이는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나마 어구 파손만 인정되고 어획량 감소, 어획활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 제외돼 있다. 어민들이 현실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전남도에 지원하는 해파리 제거사업비도 지난해 2억4천50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줄어 제거작업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해파리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연안 격려 하락, 어구 파손, 어획활동 중단 등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인명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해파리에 쏘여 8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문제는 해파리 피해에 대한 대책과

無 等 鼓

고대 페르시아의 군주들은 관리의 부정과 압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백성들과의 일한 시간을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은 가져야 했다. 불만을 호소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리 비천한 천민이라고 해도 군주는 어떠한 존재자도 없이 그들의 청원을 끝까지 듣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줘야 했다.

모든 청원자가 군주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한 군주는 평원 한가운데에서 말을 타고 알현을 받았 다. 궁궐의 문과 대기실, 통로, 커튼과 같은 물리적 장벽은 물론 시가심 많은 시종과 부관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대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사만왕조(Samanid dynasty·874~999)의 한 군주는 ‘군주의 시종들로부터 알현을 거부당한’ 힘없는 백성이 부당한 제도 또는 압력의 시정을 바라고 자신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폭설이 쏟아지던 날 부하라(Bukhara-우즈베키스탄의 도시)의 거대한 광장 한가운데에서 시종 한 명 없

이 홀로 앉아 꼬박 밤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페르시아의 군주들은 또 지방 관리들을 사찰하고 올바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역에 상인이나 탁발승으로 위장한 스파이들을 첩투시켜 민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고토록 했고, 부정한 관리들을 다스릴 엄중한 처벌안도 마련했다.

세금징수원과 대리인은 2~3년에 한

번씩 교체해 부패와 횡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지방이 아닌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청렴한 감찰관을 등용해 제국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겼다.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주와 백성 간의 소통, 그리고 관리에 대한 견제가 무지배한 사만왕조(Samanid dynasty·874~999)의 한 군주는 ‘군주의 시종들로부터 알현을 거부당한’ 힘없는 백성이 부당한 제도 또는 압력의 시정을 바라고 자신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폭설이 쏟아지던 날 부하라(Bukhara-우즈베키스탄의 도시)의 거대한 광장 한가운데에서 시종 한 명 없

/홍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茂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제작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 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인 자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기획 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